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유병규

국내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을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양극화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표출된 결과로 인식하고, 이의 해소를 향후 경제 정책의 제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점에서도 이의 심각성이 확인된다. 경제적 성과가 양 극단으로 나누어지는 경제 양극화 현상이 우리 경제 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물 측면에서는 수출과 내수,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각 경제 부문간에 성장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금융 부문에서도 은행권과 비은행권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종별이나 지역간 고용과 임금 및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경제 양극화 현상은 국내 경제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도 각기 그 유형을 달리하며 소득 분배 악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1970-80년대에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개인간 소득 분포의 양극화가 초래된 것은 앵글로색슨 유형으로 분류된다. 1990년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노르딕 국가 유형으로, 산업간, 지역간, 기업간 양극화가 나타난 것은 유럽대륙 유형으로 불려진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 경제 국가들의 경우, 소득이 최상위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하고, 빈곤율도 높은 실정이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상위 10% 소득계층 중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은 개략 70년대 후반기까지는 계속 하락하였으나, 80년대 중반 이후에 급상승하여 2000년 현재 약 32(캐나다)~36%(미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우리와 같이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양극화가 빨리 진행됨으로써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문제로 대두하였다. 1990년대 초에 경제 위기를 겪은 스웨덴의 경우는 지니 계수가 1990년 0.249에서 1994년에는 0.290으로 상승하였고, 1992년에 환율 위기를 당한 이태리도 지니 계수가 1992년 0.324에서 1994년에는 0.366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의 진행 속도가 그 어느 경우보다도 빠르고, 경제·사회 전 부문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OECD국가들을 80년대와 90년대의 성장률 및 소득 분포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한국은 일본과 함께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달리 '저성장 기조로 추세가 전환되는 가운데 분배가 악화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불균형 성장 현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부문간, 업종간, 기업 규모별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까닭이다.

국내 경제의 부문별 경쟁력의 간극이 깊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데 있다. 우선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 현상이 국내 산업별 성장성을 차별화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뜨거운 경쟁을 해왔던 중화학 공업이나 IT와 같은 수출 산업 부문은 그간 확보한 경쟁력을 토대로 성장세가 높은 데 비해,

내수 시장이라는 작은 연못에 안주해 있던 서비스업과 같은 내수 산업은 개방의 태풍을 몰고 오는 세계화 추세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성장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적응 정도에 따라 성장과 침체의 간격이 깊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급속히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섬유나 각종 생활용품과 같은 국내 경공업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부품 소재 산업 기반이 부실하다는 국내 산업 구조의 취약성도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제일의 주력 산업으로 부상한 IT 산업은 대부분의 부품과 소재를 외국에서 충당하고 있다. IT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그 과실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외환위기 후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국내 서비스업의 영세성이 더욱 악화된 것도 우리 경제가 양극화 상태에 빠져드는 데 일조를 하였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자본에 가족 단위의 전근대적 경영을 하다 보니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 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퇴직자가 급증함으로 종사자 규모가 1~4명에 불과한 영세 자영업자의 수는 1996년 240만 명에서 2004년에는 약 26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경제 양극화 현상이 초래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 부문간 단절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국내 경제의 개방이 확대되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 경제의 부문간 성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세계화가 된 부문은 해외 부품과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해외로 이전해 나가면 산업간이나 기업 규모별 연결 고리는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이대로 가게 되면 경제 활동의 연계 역할을 하는 기계 부품 산업과 중소기업의 기반이 와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해지면 그만큼 대내외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여 경제의 불안정성도 높아진다.

경제 부문별 단절 현상은 경제적 중산층을 붕괴시켜 정치 사회적 완충 지대마저 사라지게 한다. 중산층의 기준은 경제, 사회, 정치 등 여러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경제학적 측면에서조차도 통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OECD 기준에 의하면 중산층은 중위수 (median) 소득의 50~150% 범위 내에 있는 가구나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고용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중산층 상당수가 안정적인 생계 수단을 찾지 못하여 저소득 계층으로 전락하는 중산층의 쇠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 직후 중산층 비율은 1997년 68.5%에서 2004년에 63.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감소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감소분 4.6%p중에서 0.7%p만이 상류층으로 상향 이동한 반면, 대다수인 3.9%p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

중산층의 붕괴는 사회 갈등의 심화로 연결된다. 현재 국내 정치와 사회 갈등이 갈수록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경제 양극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고교 등급제 역시 사교육비라는 경제적 능력의 양극화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이다. 최근 실적을 보면 최상위 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최하위층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문간 경제 환류의 단절에 의한 소득 불평등의 확대는 노사 관계 악화, 계층간

갈등을 고조시켜 정치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투자와 소비 심리를 냉각시켜 국내 경기를 더욱 위축시킨다.

경제 양극화의 또 다른 문제점은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는 데 있다. 양극화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양극화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까닭이다. 경제 양극화의 원인은 한 마디로 부문간 경쟁력 차이에 존재한다. 이같은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시장 원리에 입각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 부문의 생존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양극화 현상이 더욱 확대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다음으로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분배 정책에 역점을 둔다면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높여준다. 정부 여당이 성장과 분배 정책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 데는 이같은 고민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정책의 딜레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동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경제가 1만 달러 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시혜적 복지에 의한 해결 방안은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분배 몫 다툼을 일으키고 계층간 분열을 조장하게 된다. 연이은 정치 일정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해야하는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이같은 상황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일체성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 인기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며 분배의 몫을 키워 중산층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양극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부문간 연결 관계를 충실히 맺게 할 수 있는 부품 기계 산업과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선도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 능력과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투자 여건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취약 부문의 육성 방법 역시 지원이 아닌 시장 원리에 의한 경쟁과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 취약 부문인 경공업, 중소기업, 서비스업에 대한 무분별하고 일시적인 정책적 지원보다는 한계 기업 퇴출이라는 보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몸매 좋은 '쓴약 처방'이 된다. 경제 양극화 문제를 단기적 과제로만 접근하면 이는 이념적 양극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을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명심해야 한다. 결국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정치권에서 양극화의 해결 방안에 대한 동일한 목표와 방법론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성과 분담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